

최태원 “韓 기업, 성장할수록 불리… 규제·정책 혁신 필요”

(SK그룹·대한상의 회장)

최 회장, 韓 경제성장 둔화 우려
계단식 규제·경제형별 등 문제 지적
“새로운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기업규제환경을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상공회의소

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리소스 탈출’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 세대의

미래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성장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배 재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

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규제 환경’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억제하는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별 문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기업 투자에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과감한 투자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협

력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EU의 쟁쟁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관광과 산업 전반에서 추가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I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1면 ‘4.7조 지원사격…’서 계속

9조 ‘샤힌 프로젝트’ 편입 임박… 감산 원칙·범위 혼선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신규가동 기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업계 반발… “특별취급 받고 있어”

정부가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산 기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9조원 이상이 투입된 에쓰오일(S-OIL)의 대형 석유화학 사업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설비들은 감산 압박을 받는 반면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신규 설비의 가동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현재 공정률이 약 92%로, 올해 6월 기계적 완공을 거쳐 하반기 상업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 생산시설로, 가동 시 연간 에틸렌 180만톤, 프로필렌 77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공사현장 /에쓰오일

만톤, 부타디엔 20만톤, 벤젠 28만톤 등을 생산하게 된다.

문제는 에틸렌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기존 NCC 설비들이 감산과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샤힌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규모 공급원으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설비가동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의 수급 조정 효과가 약화되고, 구조조정 부담이 기존 설비와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울산 산업단지 내 수급 균형이 흔들릴 경우 손실 규모가 연간 4000억원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쓰오일은 아직 상업 가동 전 단계에 있는 신규 고효율 설비를 기존 감산 논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설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최신 대형 설비까지 일괄적으로 감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업계 전반에서는 신규 설비만 예외로 둘 경우 감산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가 사실상 구조조정 논의에서 ‘특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외교적 부담으로 강도 높은 조정

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신규 대형 설비 가동과 감산 기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설비 가동 여부를 넘어 구조조정 원칙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이 개별 기업이나 하나의 석유화학 콤플렉스로 움직이는 구조인 만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체 차원의 수급 조정과 국내 경쟁 완화, 글로벌 경쟁력 유지까지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기술적·공학적으로는 산업이 지향해야 할 고효율 설비가 맞다”면서도 “신규 설비에만 정책적 예외가 적용되면 시장 왜곡과 공급 불균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콤플렉스 구조를 감안해 국내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경영권 승계 구도 ‘선명’ 증권가 한화 목표가 상향

성장성·수익가치 재평가 전망

증권가는 이번 인적분할이 김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명확히 하고 신사업 성장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고 잇따라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한화의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했으며, 흥국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17만5000원과 15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다. 주력 계열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에 나서면서 성장과 수익 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룹 유통 부문 핵심 축인 갤러리아백화점이 역성장 중인 상황은 뼈아프다. 지난해 1~3분기 한화갤러리아 영업이익은 3억원에 그쳤다. 전체 매출 중 약 80%를 차지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이 2년 연속 역성장했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 명품관 매출은 약 1조1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광고점(-2.5%), 대전 타임월드점(-3.6%), 천안 센터시티점(-7%)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경기 침체로 명품 수요가 급감하며 전체 매출 중 약 40%가 명품에서 나오는 갤러리아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사장은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정면돌파에 나선다. 압구정 명품관에 약 9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6년간 공사를 진행하는 것. 단순한 리뉴얼을 넘어 압도적인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이탈한 VIP 고객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승부수다.

4조7000억원 규모 투자를 통해 시험대에 오른 김 부사장이 ‘본업 경쟁력 회복’과 ‘신사업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글로벌 전기차 가격인하 경쟁… 현대차·기아 등 K-기업 ‘맞붙’

BYD·테슬라發 ‘치킨게임’ 움직임

연초부터 국내 전기차의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해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기아와 미국의 테슬라도 가격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가 전기차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확대와 전기차 전환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구매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모델 3의 퍼포먼스 트림 가격을 693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인하했다. 모델 Y는 프리미엄 RWD를 4999만원으로 조정하며 국내 전기차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3를 3500만원대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산 NCM 배터리 탑재 모델의 경우 보조금이 늘어나 국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YD는 지난해 가성비 모델로 안정적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6107대 가운데 가성비 모델인 아토

3(3076대)와 씨라이언7(2662대)이 전체 판매량을 이끌었다. 중형 SUV 씨라이언7은 정부 보조금을 반영하면 4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로 입소문 나면서 출시 4개월 만에 이같은 성적표를 기록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공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최대 590만원, 아이오닉 6에 최대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 역시 대형 전기 SUV EV9를 대

상으로 최대 600만원 상당의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르노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전기 SUV 세닉에 최대 8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 전기차 시장 전반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성차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단기적인 전기차의 수익성은 감소되며 하이브리드(HV) 차량의 상승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진수 현대자동차그룹 HMG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보조금 지원과 중저가의 대중적인 전기차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둔화되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